

12-12 (통권 제 483호)

2012. 4. 2.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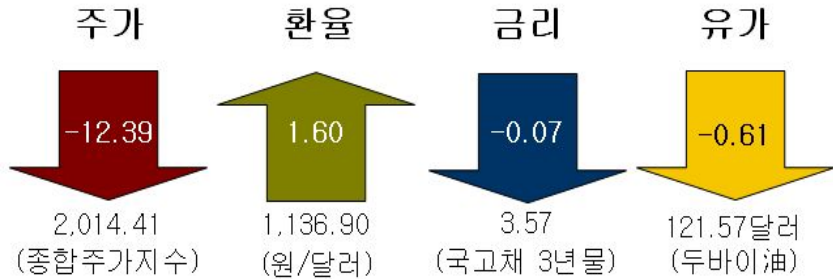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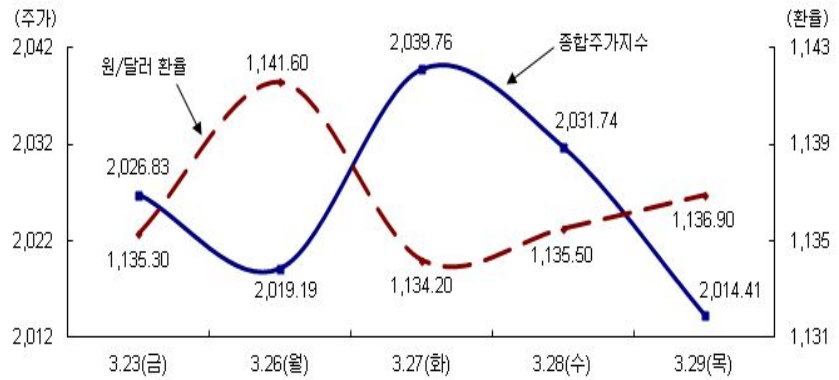
-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넉프’ (Not Out Of My Pocket) 현상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23~3.29)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넉프’(Not Out Of My Pocket) 현상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대표 집필 : 김 동 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 조 호 정 선임 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복지 의식의 이중성과 '넉프'(Not Out Of My Pocket) 현상

○ 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 : '보통이다'는 평가가 55.4%로 가장 많았음

-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는 보통 '(55.4%)이 가장 많아 대체적으로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나, 충분하다 '(8.7%)보다는 미흡하다'(35.8%)는 평가가 4배 정도 높았음
- 가장 미흡한 서비스는 '일자리'(31.8%) 관련 복지서비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27.6%), '보육'(20.4%)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장 만족스러운 서비스는 '건강'(37.7%) 관련 복지서비스 .다음으로 , 노인/장애인(20.2%), '교육'(17.9%)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서비스는 '일자리'(33.0%) 관련 서비스였음 다음으로, '노인/장애인 (25.0%)', '보육 '(19.3%)의 순으로 나타나 ,앞에서 가장 미흡한 서비스'에 대한 답변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줌
- '노인/장애인' 서비스는 미흡한 서비스 2위, 만족스러운 서비스 2위, 개선되어야 할 서비스 2위로서 좋다는 평가와 미흡하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과거에 비하면 좋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평가로 해석됨

○ 복지국가 비전 :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복지' 선호도 높아

- 지속가능한 복지, 성장하는 복지, 중산층이 튼튼한 복지의 3요소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재정건전성과 성장에 기반한 복지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남
-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84.9%에 달함
-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성장하는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75.2%에 달함
-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함께 키우는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68.3%에 달함

○ 복지 현안에 대한 평가 : 혜택은 좋지만 포퓰리즘은 경계하는 '이중성'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비율이 64.4%에 달

하고, '여야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복지공약은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65.6%가 공감한다고 답변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의식의 이중성 현상이 나타남

-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비율이 예상과 달리 높게 나타나 무상 혜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공약은 포퓰리즘이 맞다면서 경계하고 있음

○ 복지 재원조달 방안 : '나의 비용 부담은 싫다'는 '넘프'(NOOMP) 현상

- 복지 강화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무자중세'(39.2%), '탈세예방'(37.5%), '예산절감'(18.7%), '세율인상'(4.6%)의 順이었음
- 복지 서비스의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복지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는 **나의 비용부담은 가장 적게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하겠다는 '넘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 관찰됨

○ 시사점

- 첫째, 우리 '복지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상당히 존재하고,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아, 향후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복지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둘째, 가장 미흡하고, 가장 개선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일자리', '노인 장애인', '보육'의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 사회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복지의 수준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셋째, 전통적 북유럽식 복지국가와 다른,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성장하는 복지, 중산층이 튼튼한 복지에 대한 順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새로운 복지국가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 성장하는 복지국가 + 중산층이 튼튼한 복지국가

1. 조사개요

○ 개요

- 조사 기간 : 2012년 3월 6일 ~ 3월 13일(8일간)
- 조사 주최 : 헤럴드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 조사 방식 :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전국 1,008개 샘플을 수집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 3.09)
- 조사 대상 : 전국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녀

○ 응답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별				결혼유무별			직업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기혼	미혼	기타	화칼	불칼	자영	학생	주부	농림	무직
명	507	501	217	257	257	277	679	309	20	434	74	135	88	192	13	67
%	50.3	49.7	21.5	25.5	25.5	27.5	67.4	30.7	2.0	43.3	7.4	13.5	8.8	19.1	1.3	6.7

구분	소득수준별						자산규모별						학력별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	500~	1억	1~3억	3~5억	5~10억	10~20억	20억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명	79	19	223	193	123	165	366	318	156	87	28	10	73	220	652	62
%	8.0	20.3	22.7	19.7	12.5	16.8	37.9	33.0	16.2	9.0	2.9	1.0	7.2	21.8	64.7	6.2

구분	지역별									지역규모별		
	서울	경인	충청	호남	부산 울산 경남	대경	강원	제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명	210	275	102	106	163	109	32	11	475	326	207	
%	20.8	27.3	10.1	10.5	16.2	10.8	3.2	1.1	47.1	32.3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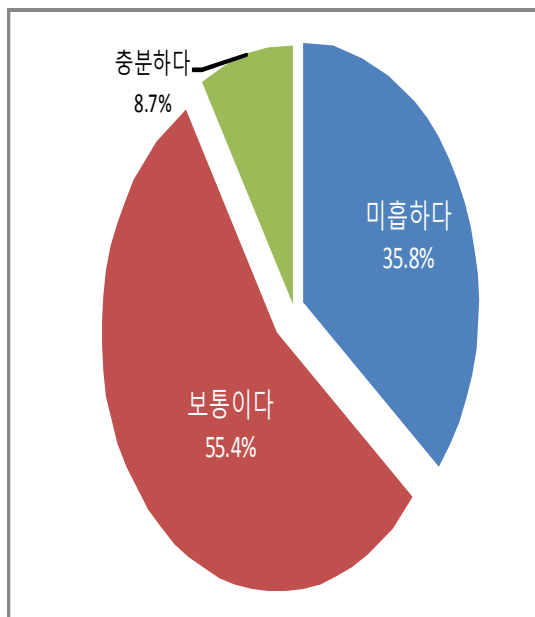
2. '복지수준 평가와 복지국가 비전' 조사 결과

(1)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 : '아직 갈 길이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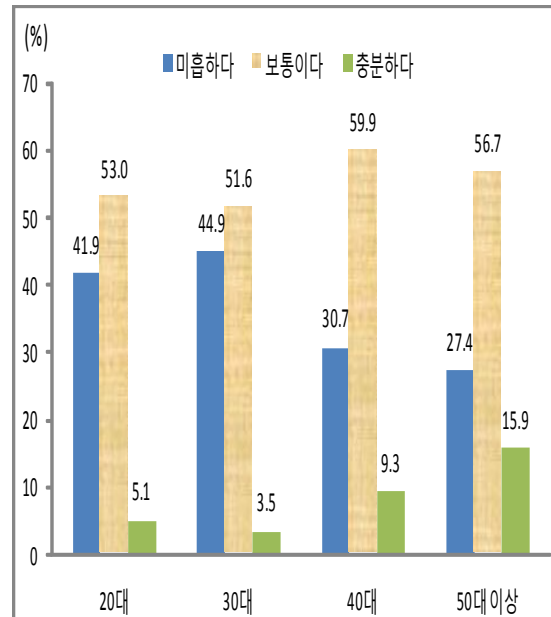
○ (복지수준) 우리나라 복지 수준에 대해 '보통'(55.4%)이 가장 많아 대체적으로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나, '충분하다'(8.7%)보다는 '미흡하다'(35.8%)는 평가가 4배 정도 높았음

- 복지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충분하다'는 8.7%, '보통이다'는 55.4%, '미흡하다'는 35.8%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40% 이상이 '미흡하다'고 답변한 반면, '40대'는 30.7%, '50대 이상'은 27.4%가 '미흡하다'고 답변하여 젊은 층일수록 복지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미혼'일수록, '학생'일수록 복지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게 나타나 '젊은 층'의 불만과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서울', 학력별로는 '대졸'의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이나 자산규모에 따른 추이를 보면 '불만'의 비율이 특정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음

<복지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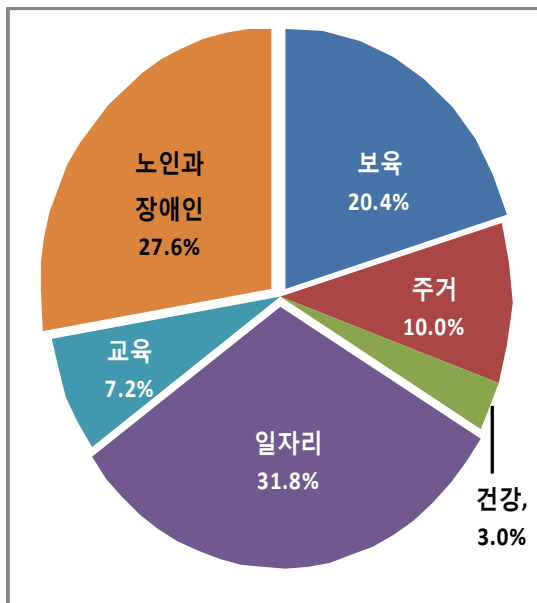
<연령별 복지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 (미흡한 복지서비스)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에서 가장 미흡한 서비스는 '일자리', '노인/장애인', '보육'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처한 상황 및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남

- 복지서비스가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일자리'로 31.8%, '노인/장애인' 27.6%, '보육' 20.4%, '주거' 10.0%, '교육' 7.2%, '건강' 3.0%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일자리', 30대는 '보육', 40대는 '일자리'와 '노인/장애인', 50대 이상은 '일자리'가 가장 미흡한 복지서비스라고 답변했으며, 보육이 현안으로 되어 있는 30대의 경우 가장 미흡한 서비스로 '보육'을 꼽았음
-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는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보육'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블루칼라는 '일자리', 자영업자는 '노인/장애인', 전업주부, 농림어업 종사자, 무직/퇴직자는 '일자리'에 대한 불만이 높았음
- 소득수준과 학력이 낮을수록 '일자리' 관련 복지에 대한 불만이 높았음
-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았음
-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보육'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지역적으로는 강원도와 호남지역의 '보육'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미흡한 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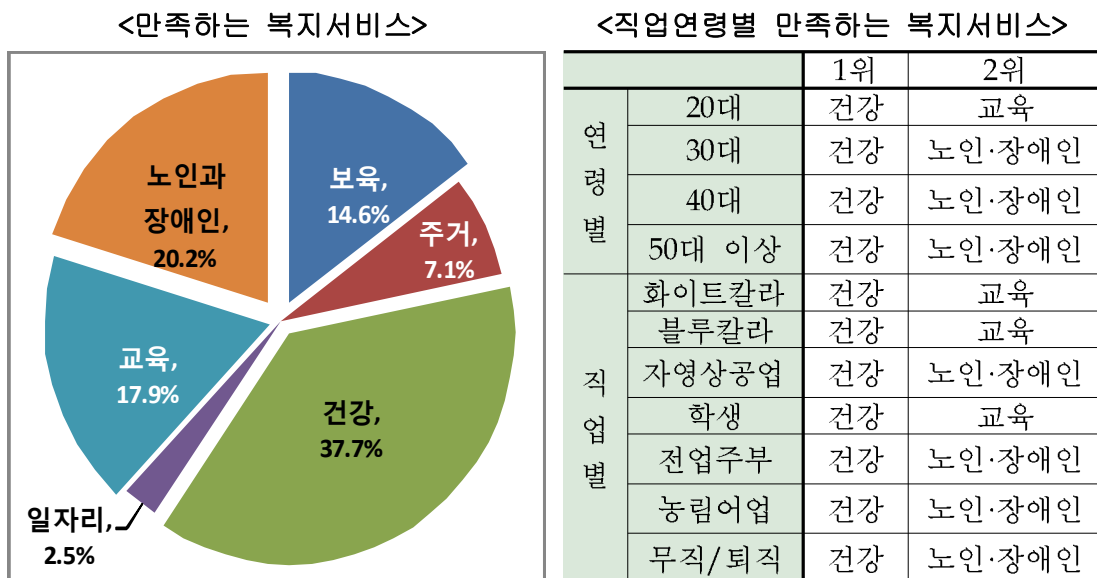


<연령직업별 불만족 복지서비스>

		1위	2위
연령별	20대	일자리	노인·장애인
	30대	보육	일자리
	40대	일자리	노인·장애인
	50대 이상	일자리	노인·장애인
직업별	화이트칼라	일자리	보육
	블루칼라	일자리	노인·장애인
	자영상공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학생	일자리	노인·장애인
	전업주부	일자리	노인·장애인
	농림어업	일자리	노인·장애인
	무직/퇴직	일자리	노인·장애인

○ (만족한 복지서비스) 가장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는 '건강', '노인/장애인', '교육'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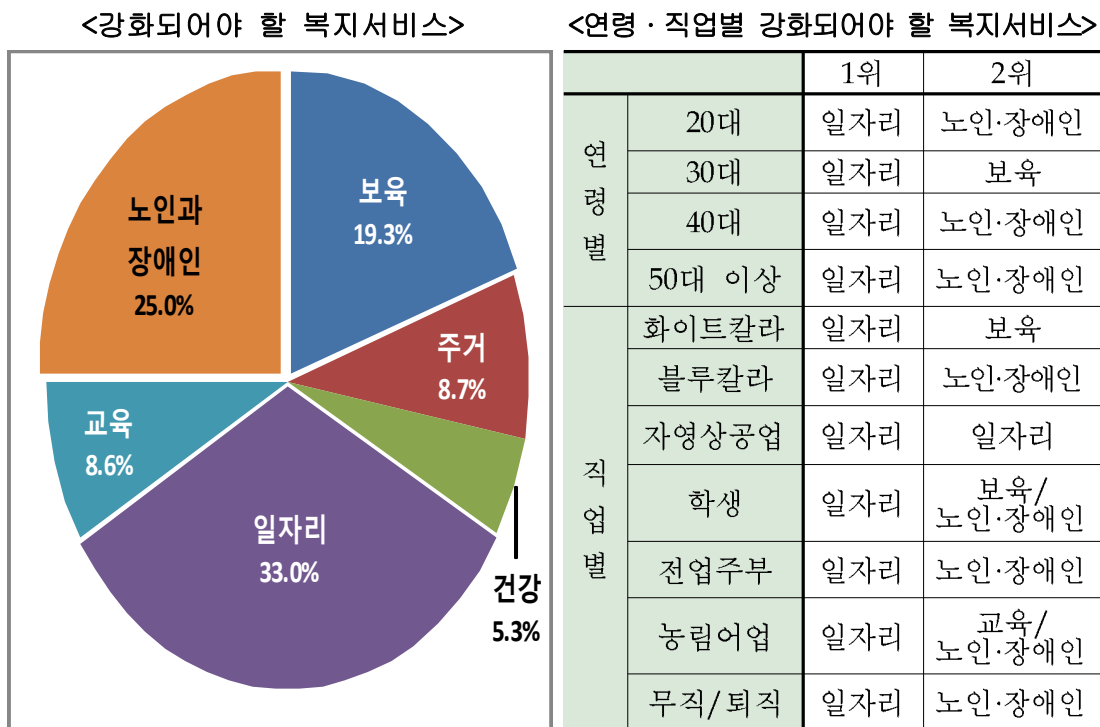
- 가장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는 '건강'으로 37.7%, '노인/장애인' 20.2%, '교육' 17.9%, '보육' 14.6%, '주거' 7.1%, '일자리' 2.5%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건강'과 '교육', 30대 이상은 모두 '건강'과 '노인/장애인'을 가장 만족스러운 복지서비스로 꼽았음
- 연령, 학력, 소득수준, 자산규모, 직업 등 모든 범주에서 '건강'이 가장 만족스러운 복지서비스로 선정됨
- 연령이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답변이 많았음



○ (보완되어야 할 복지서비스)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복지서비스는 '일자리', '노인/장애인', '보육'의 순으로 나타나, 앞에서 '가장 미흡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답변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남

-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복지서비스는 '일자리'로 33.0%, '노인/장애인' 25.0%, '보육' 19.3%, '주거' 8.7%, '교육' 8.6%, '건강' 5.3%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장 미흡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와 일치함
- 연령별로 보면 모든 계층에서 '일자리' 관련 복지서비스를 가장 강화시켜야 한다고 답변함

-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는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최근의 맞벌이 트렌드와 맞물려서 화이트칼라의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 보육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추정됨
 - 소득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서, 보육서비스의 수혜대상을 극빈층에서 중산층이상으로 확대한 최근의 조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보육'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고, 지역적으로는 강원도와 호남지역의 '보육'에 대한 '개선 요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노인/장애인' 서비스는 미흡한 서비스 2위, 만족스러운 서비스 2위, 개선되어야 할 서비스 2위로서 '좋다'는 평가와 '미흡하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 금번 설문조사 결과는 과거에 비해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가 향상되었으나,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의 전환 등과 같은 환경변화로 인해 '노인/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비해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면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평가로도 해석됨



(2) 복지국가 비전에 대한 의견 :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높은 선호도

○ (지속가능한 복지)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84.9%에 달함

- '재정은 건전하므로 복지확충을 위해 더 지출하는 복지국가'와 '복지지출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자는 15.1%, 후자는 84.9%로서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복지수준이 낮고 복지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건전한' 의견이 85%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20대 79.7%, 30대 84.8%, 40대 87.5%, 50대 이상 86.6%로서 나이가 많을수록 재정건전성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성장하는 복지) '성장하는 복지'(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선호도가 75.2%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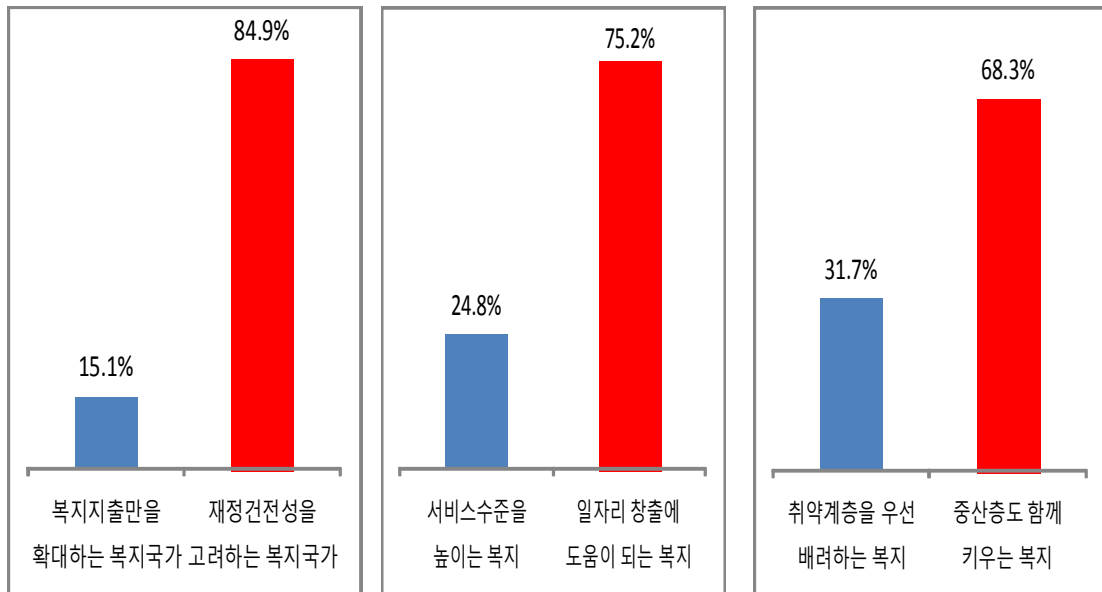
- '낮은 복지수준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복지'와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복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전자는 24.8%, 후자는 75.2%로서 '성장하는 복지'(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선호도가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선호하는 의견은 연령별로 보면 40대,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20-30대의 경우 '낮은 복지수준 향상'을 지지하는 의견이 40대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에서 성장하는 복지를 지지하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

○ (중산층이 튼튼한 복지) '중산층이 튼튼한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68.3%에 달함

-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복지'와 '주거, 보육, 사교육 등의 부담을 줄여서 중산층도 함께 키우는 복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자는 31.7%, 후자는 68.3%로서 '중산층이 튼튼한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취약계층 중심의 '선택적 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중산층으로의 수혜범위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43.5%가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선택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28.6%), 30대(25.7%), 40대(27.6%)에 비하면 젊은 층과 노령층 사이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으로 알 수 있음

<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에 대한 선호도 >



○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 지속가능한 복지, 성장하는 복지, 중산층이 튼튼한 복지의 順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재정건전성과 성장에 기반한 복지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남

- 한국적 현실에 맞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복지', '중산층도 함께 키우는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3) 복지 현안에 대한 평가 : 복지 의식의 '이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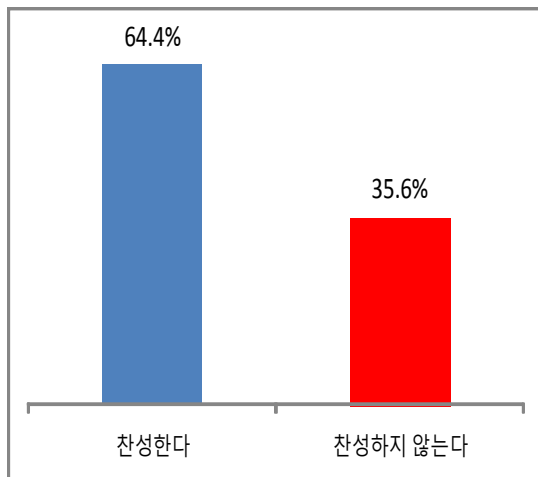
○ (무상복지 공약)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공약들에 대한 찬성 비율이 64.4%로 높게 나타남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공약들에 대해 '찬성' 64.4%, '반대' 35.6%로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젊은 층일수록 찬성률이 높게 나타남. 20대 75.4%, 30대 72.7%, 40대 59.7%, 50대 이상 52.4%
- 기혼보다는 미혼의 찬성률이 높게 나타남. 기혼 60.1%, 미혼 73.6%
- 소득과 자산이 작을수록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일수록 복지에 대한 추가적 요구가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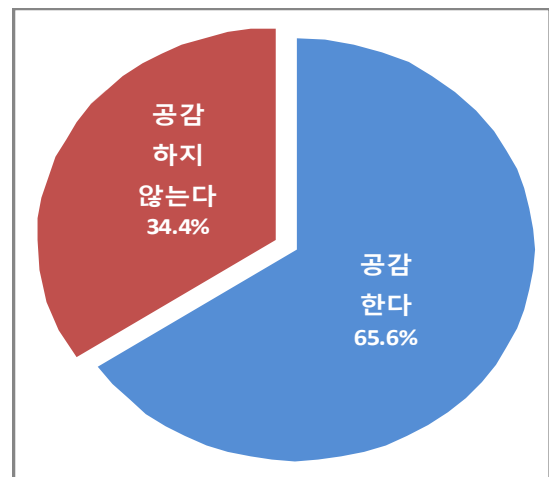
○ (복지 포퓰리즘) 최근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 65.6%가 공감한다고 답변함

- 무상복지 공약들에 대한 찬성 의견이 64.4%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65.6%로 높게 나타남
-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비율이 예상과 달리 높게 나타나 무상 혜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공약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 맞다'면서 경계하고 있음.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산규모가 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한 공감 의견이 높게 나타남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의견>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의견>



(4) 복지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의 '넘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

○ (재원조달 방안)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은 '부자 증세'와 '탈세 예방'이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율 인상'에 대한 응답률은 가장 낮아, '넘프'(NOOMP; Not Out Of My Pocket)현상이 드러남

- '복지서비스의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나의 비용부담은 가장 적게, 그리고 가장 나중에'라는 식의 '넘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 관찰됨

- 복지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부자 증세' 39.2%, '탈세 예방' 37.5%, '정부 예산 절감' 18.7%, '세율 인상' 4.6%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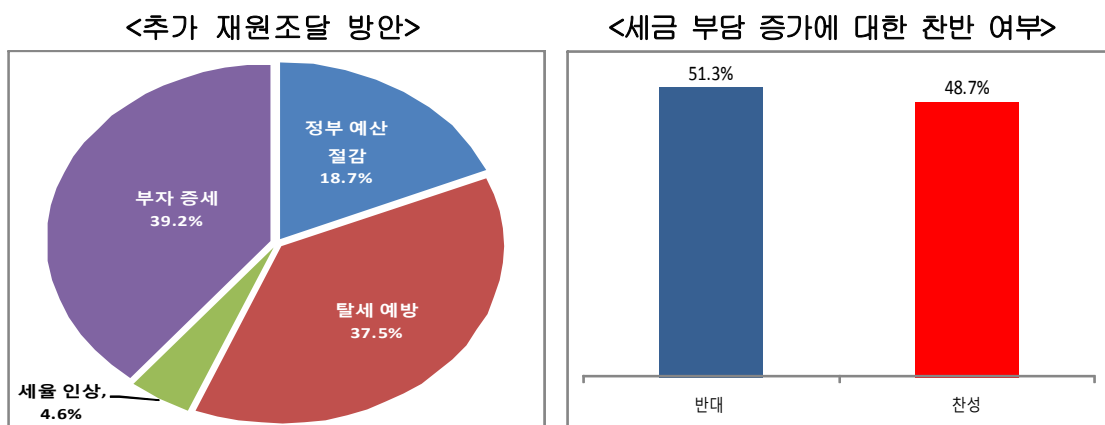
· 재원조달은 부자 증세, 탈세 예방, 예산 절감 등 내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는 방안을 선호했으며, 내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율 인상'은 응답률이 4.6%에 불과하여,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님비현상, 즉 '넘프' 현상이 관찰됨

·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부자증세' 의견이 가장 높았고,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부자증세 의견이 높음

○ (稅 부담 확대 찬성여부) 복지서비스 강화에 따른 세금 부담 확대에 대해 찬반 의견이 49 대 51로 팽팽하게 맞서 있음

- 복지서비스 강화에 따른 세금 부담 확대에 찬성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반대' 51.3%, '찬성' 48.7%로서 찬반이 팽팽함

· 추가 세금부담에 49%가 찬성했다는 점에서 복지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세금 증대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함



- 반대로, 51%가 반대했다는 점에서 복지 강화를 위한 세금 부담 확대가 쉽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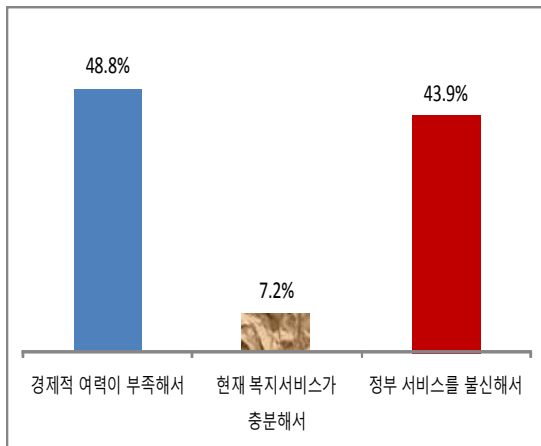
○ (稅 부담 반대 이유) 세금 부담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력 부족'이 가장 많았음

- 복지서비스 강화에 따른 세금 부담 확대에 반대하는 51.3%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반대 이유를 물었을 때, '경제적 여력 부족'이 48.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부 서비스 불신'이 43.9%로 많았음. 이 두 응답을 합치면 92.7%에 달함
- '현재 복지서비스가 충분해서'라는 응답은 7.2%에 불과했음
-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경우 세 부담 확대에 대한 '반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북유럽에서도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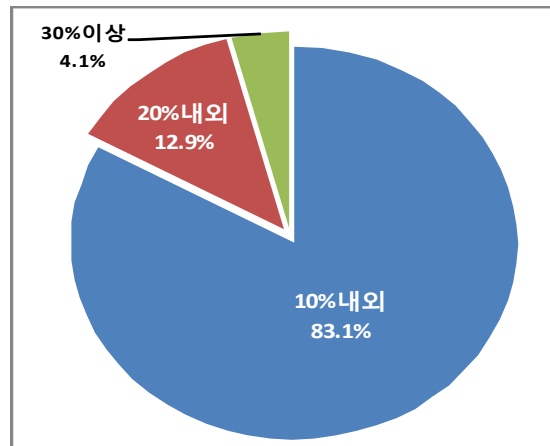
○ (세금 추가부담 규모)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규모는 현재 세금의 10%내외라는 답변이 83.1%로 가장 많았음

- 세금 추가부담 찬성자(48.7%)의 추가부담 규모를 물어본 결과 '10%내외'라는 응답이 83.1%로 가장 많아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함
- 세금 추가부담의 규모가 '20%내외'라는 응답은 12.9%, '30%이상'이라는 응답은 4.1%에 불과함
- 복지서비스는 더 받고 싶지만, 세금 추가부담은 최소로 하고 싶다는 이중적 성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복지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추가 세금 부담에 반대하는 이유>



<추가 세금 부담은 현재 세금의 % 내외>



< ‘눔프’ 현상의 또 다른 사례 : “통일은 찬성하지만 비용 부담은 싫다” >

○ 통일의 필요성에는 대다수(73.7%)가 공감하지만, 통일비용은 대부분(67.2%) 부담하기 싫어함

- 2012년 2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002명의 국민 중 73.7%인 절대 다수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음
 - 통일의 필요성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대부분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는데, 20대(62.0%), 30대(70.0%), 40대(81.1%), 50대 이상(79.1%)의 순으로 높았음
- 그러나, 통일비용의 부담은 2012년 2월 현재 31.6%가 부담하기 싫다', 35.6%가 '연간 1만원 이하'라고 응답하여 67.2%가 비용부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함
 -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2011년 11월에는 79.4%가 통일비용 부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바 있음

< 통일의 필요성 >

통일 필요성	전체	보수	중도	진보
필요	73.7%	68.1%	75.8%	79.1%
필요없다	21.1%	26.6%	18.0%	16.8%
모르겠다	5.2%	5.3%	6.2%	4.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2년 2월 조사

< 통일비용 부담 여부 및 규모 >

통일비용	2008.11	2011.11	2012.2
부담하기 싫다	30.4%	46.0%	31.6%
年1만원 이하	24.0%	33.4%	35.6%
年2~10만원	35.3%	17.5%	26.5%
年11~50만원	10.2%	2.6%	4.7%
年51만원이상	—	0.5%	1.5%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연도별 설문조사 결과

3. 시사점

- 우리 '복지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상당히 존재하고,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아 향후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복지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최근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2/3에 가깝고,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85%에 달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가장 미흡하고, 가장 개선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일자리', '노인/장애인', '보육'의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 모든 연령층에서, 그리고 소득과 자산의 다과(多寡)를 막론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서비스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사회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복지의 수준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음
- 젊은 층과 저소득층,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보육서비스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우수한 인적자본 형성에도 기여하는 '투자' 활동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
 - 도시의 젊은 부부를 위해 24시간 보육서비스, 직장과의 연계한 보육서비스 등이 필요하며, 강원도를 비롯한 농촌지역과 중소도시의 보육서비스 접근성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시급함

○ 복지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넘프현상’(NOOMP; Not Out Of My Pocket)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함

- 부자 증세와 탈세 방지, 정부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조달을 선호하고 나의 세금 부담은 ‘10% 내외’로 최소화하려는 도덕적 해이와 ‘넘프현상’(NOOMP; Not Out Of My Pocket)에 대응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확산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의 복지서비스와 세금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
- 稅政의 사각지대(지하경제, 조세 회피 등)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은 물론 稅收 확충에도 기여함
- 궁극적으로는 저부담-저복지 모델에서 중부담-중복지 모델로 이행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함

○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 재정건전성과 성장에 기반을 둔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전통적 복유립식 복지국가의 모습과 다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新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성장하는 복지’, ‘중산층이 튼튼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3분의 2 이상에 달함에 따라, 기존의 복유립식 복지국가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비전 제시가 필요함
- 새로운 복지국가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 성장하는 복지국가 + 중산층이 튼튼한 복지국가

기업정책연구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2072-6213, dykim@hri.co.kr)
 조호정 선임연구위원 (2072-6217, chjss@hri.co.kr)

<참고> '복지서비스 현황 및 복지국가 비전' 설문 문항

구분		질문	답변
복지수 준 및 만족도	복지 수준	①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미흡 (2)보통 (3)충분
	복지 서비스 만족도	②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가장 미흡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여섯 중 택일)	(1)보육 (2)주거
		③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가장 만족스러운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3)건강 (4)일자리
		④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5)교육 (6)노인/장애인
복지국가 비전	⑤ 향후 복지국가의 방향은 ? (둘 중 택일)	(1)낮은 복지수준 향상 (2)산업/일자리 창출 기여	
	⑥ 향후 복지국가의 방향은 ? (둘 중 택일)	(1)취약계층 배려 (2)중산층 확충	
	⑦ 향후 복지국가의 방향은 ? (둘 중 택일)	(1)재정건전성보다 복지 (2)복지보다 재정건전성	
복지 현안	⑧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공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찬성 (2)찬성하지 않음	
	⑨ 최근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공감하십니까?	(1)공감 (2)공감하지 않음	
복지 자원조달	⑩ 복지 강화를 위한 추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1)예산절감(2)탈세방지 (3)세율인상(4)부자증세	
	⑪ 복지 강화를 위한 지출확대로 세금 부담 늘어난다면 찬성하십니까?	(1)반대 (2)찬성	
	⑫ 세금 부담 확대에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1)경제여력부족 (2)현재 복지 충분 (3)정부서비스 불신	
	⑬ 세금 부담 확대에 찬성한다면 세금의 몇 프로 더 부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1)10%내외 (2)20%내외 (3)30%내외 (4)40%내외 (5)50%이상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1.8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5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1.7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 23일	3월 29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2.24	2.16	-0.08%p
	엔/달러	81.19	80.66	77.66	82.62	82.96	0.34 ¥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3197	1.3319	0.0122\$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081	13,146	65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10,011	10,115	10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64	3.57	-0.07%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35.3	1,136.9	1.6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2,026.8	2,014.4	-12.4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 23일	3월 29일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106.68	102.84	-3.84\$
	Dubai	88.80	106.75	104.89	122.18	121.57	-0.61\$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14.47	305.94	-8.5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1/4	2/4	3/4	4/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6.3	4.2	3.5	3.6	3.3	3.6	4.0	
	민간소비 (%)	0.0	4.1	2.8	3.0	2.0	1.2	2.2	2.5	
	건설투자 (%)	3.4	-1.4	-11.9	-6.8	-4.6	-4.0	-6.5	2.3	
	설비투자 (%)	-9.8	25.0	11.7	7.5	1.0	-3.4	3.8	5.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328	294	26	55	69	127	277	170
		무역수지 (억 \$)	404	412	71	84	63	104	321	290
	수출 (억 \$)	3,635	4,664	1,310	1,427	1,412	1,416	5,565	6,344	
	증감률 (%)	(-13.9)	(28.3)	(29.6)	(18.7)	(21.4)	(10.0)	(19.3)	(14.0)	
수입 (억 \$)	3,231	4,252	1,239	1,343	1,349	1,313	5,244	6,054		
증감률 (%)	(-25.8)	(31.6)	(26.2)	(27.1)	(27.6)	(13.4)	(23.3)	(1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3.0	3.8	4.0	4.3	4.0	4.0	3.5	
실업률 (%)		3.6	3.7	4.2	3.4	3.1	2.9	3.4	3.6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4.0	3.7	3.8	3.7	3.6	3.4	3.6	4.0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56	1,120	1,083	1,085	1,144	1,108	1,05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